

역사자료를 활용한 북한 연구

원정연 | 숭실대학교 조교수 | clearlake@ssu.ac.kr

I. 들어가기

북한경제를 연구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문제는 자료의 부족이다.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경제활동을 직접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대안적 자료에 의존해 왔다. 최근에는 야간조도와 같은 인공위성 자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의 무역통계나 북한의 공식 문헌 및 『로동신문』 기사 등을 시계열로 구축하여 경제활동을 추정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직접 생산된 신뢰할 만한 경제통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찾아낸 여러 우회적인 방법인 셈이다.

다만, 북한의 현재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온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북한의 과거이다. 현재 북한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새로운 자료와 방법론이 개발되어 왔지만, 오늘날 북한을 구성하는 지역이 과거에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북한의 현재를 이해하려면 북한의 현재만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떠한 조건에서 출발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 역시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에서 시·군 단위의 경제·사회 통계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일제강점기로 돌아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당시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인구, 교육, 산업, 농업, 종교, 토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별 통계를 생산하였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이지만, 현재 북한을 구성하는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모습을 상당한 수준까지 관찰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는 우선 분단 이전 한반도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차이는 크다. 이 차이를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의 결과로만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Becker, Mergele, and Woessmann(2020)은 독일의 경우 이러한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동서독 경계가 분단 이전 프로이센주(州) 경계를 그대로 따른 것이며, 1925년 자료를 보면 노동자 계급 비율 등 여러 지표에서 동서독이 공산주의 도입 이전부터 이미 달랐음을 보였다. 즉, 분단 이후 관찰되는 차이의 상당 부분은 체제의 효과가 아니라 애초에 존재했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제도가 장기간 작동하며 남북한의 경제적 경로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은 중요하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남북한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남한과 북한 지역은 분단 이전에 얼마나 비슷했을까? 인적자본 수준은 비슷했는가? 산업구조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종교, 교육, 도시화 같은 사회적 조건은 어떠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1945년 이전 자료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역사적 자료는 현재의 북한을 연구하는 데에도 새로운 질문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경제학과 경제사에서는 과거에 형성된 제도, 인적자본, 산업구조, 사회적 특성을 주목한다. 이러한 특성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어떠한 형태로 흔적을 남기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사회과학에서 최근 주목하는 장기지속성(long-run persistence)의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의 지역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조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물론 식민지기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이 오늘날 북한에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해방과 분단, 전쟁,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과 산업화 등을 거치며 북한은 이후 매우 큰 제도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지역적 특성과 현재 북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대안적 자료를 함께 이용한다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식민지 시기의 교육 수준이나 산업구조가 달랐던 지역들이 오늘날의 야간조나 경제활동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과거의 도시와 교통망이 현재 북한의 공간적 경제구조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작업은 의외로 단순하다. 과거 북한 지역에 대해 어떠한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와 식민지기에 생산된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오늘날 북한을 구성하는 지역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남북한 지역의 인적자본, 문해율과 교육, 기독교의 확산, 산업구조 등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단 이전

북한 지역에서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지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역사자료가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는 자료에 그치지 않고, 현재 북한을 연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자료원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조선시대의 북한과 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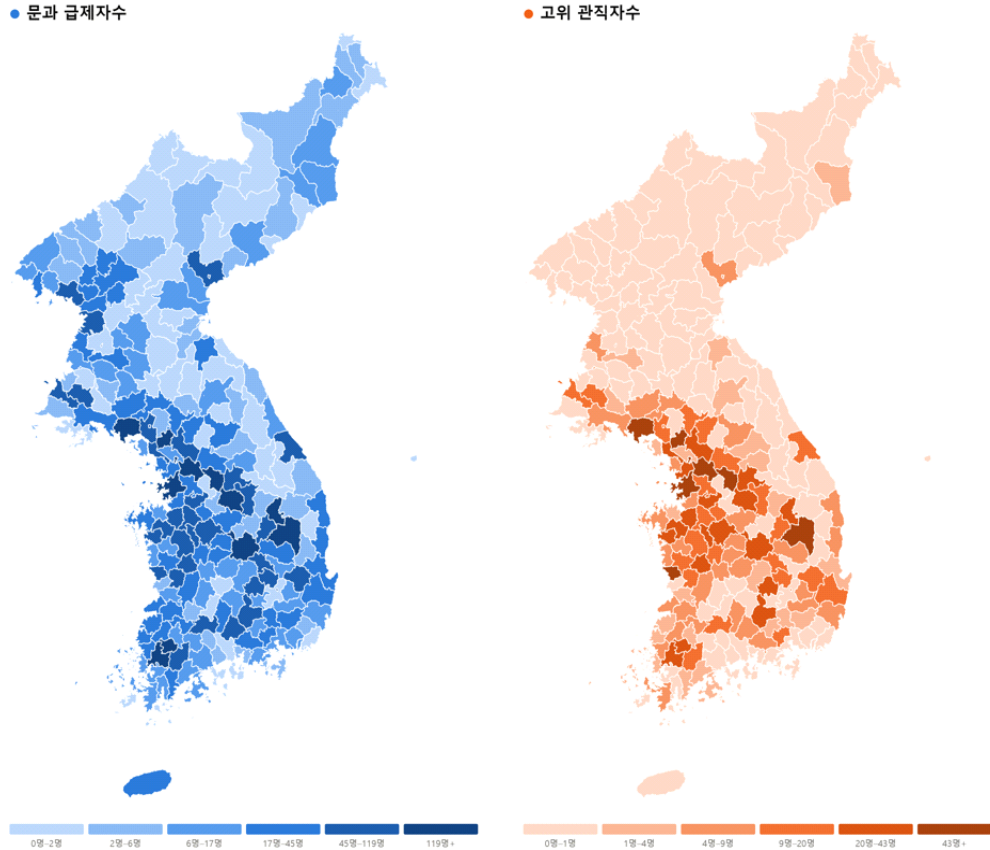
먼저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조선시대와 식민지 시기에는 공식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존재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경기도 개성 위쪽부터 강원도 위쪽까지를 북쪽 지역으로, 그 아래를 남쪽 지역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편의상의 구분이지만, 실제로 현재의 남북한 경계선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민지 시기를 논하기에 앞서, 조선시대 남북한의 차이를 살펴보자. 조선시대 남북한의 차이를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자료는 과거급제자에 관한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거 합격자와 관직 진출자를 다루는 많은 연구가 이 자료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적자본의 수준이다. 과거 합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망 혹은 교육 성과 수준이 높다는 것이므로, 이를 인적자본 수준의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다. 관련 연구로는 Hong and Paik(2018)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주요 논지는 조선시대부터 쌓인 인적자본이 식민지 시기의 인적자본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역별 과거 합격자의 자료를 사용하여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의 분포와 식민지 시대에 한국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인구의 비율, 즉 문해율 간의 상관관계를 다루었다.

과거 합격자의 분포나 성(姓)별 구성을 통해서 당시의 세대 간 이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북한의 지역별 격차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과거 합격 후 관직에 진출하는 비율에서 서북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서북지역은 조선시대 당시 중앙관직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었다.

가장 최근 연구인 이상무(2024)는 황해, 평안, 함경 지역 출신 문과 급제자들이 상대적으로 요직에 오르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고 보고한다. 흥미로운 점은 동 연구가 차별의 지점을 정확히 짚어 낸다는 데 있다. 평안도 출신 문과 급제자의 수는 조사 기간 동안 도 단위로

[그림 1]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분포 및 관직 분포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비교했을 때 경상도 다음으로 많았다. 즉, 과거시험 자체는 서북 지역을 특별히 배제하지 않았다. 문제는 급제 이후였다. 이들은 정승이나 판서 같은 최고위직에 오른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요직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홍문관이나 승정원 관원이 되는 경우도 매우 적었다. 즉,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은 과거제도가 아니라 급제 이후의 관리 임용 단계에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서북지역 관직 진출의 불리함을 다룬 연구는 이 외에도 있다. 오수창(2008)은 평안도 출신 문신들이 관직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음을 밝혔다. 이들은 승문원 분관에 들지 못하는 것을 시작으로, 참서관이 된 이후에도 통청을 받지 못해 권위 있는 청직에 오르지 못했다. 손혜리(2019)는 각종 문헌에 나타나는 서북인

서술을 검토해, 서북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실상을 다루었다.

정리하면, 남한과 북한은 조선시대부터 이미 차이가 있었다. 서북 지역은 과거시험이라는 관문 자체에서는 배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급제 이후 중앙 정치에서는 꾸준히 소외되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 즉 능력은 인정받되 권력에는 오르지 못하는 구조는 남한과는 다른 북한만의 사회·문화적 조건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식민지 시기 데이터를 통해 남북한이 당시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남한과 북한의 인적자본은 어떻게 달랐는가? - 식민지 시기 자료를 통해 본 차이점

조선시대의 정치적 소외가 남북한 지역에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조건을 만들었다면, 이 차이는 식민지 시기 자료에서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시대에는 없던 다양한 통계와 기록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가 온전히 조선시대에는 형성된 것은 아닐 수 있으며, 많은 부분은 식민지 시기에 일본이 시행한 일련의 정책의 결과로 나온 차이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본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에 속한다. 이를 논하기 전에 여기서는 식민지 시기에 포착할 수 있는 남북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개신교 확산과 문해율, 산업구조라는 세 지표로 식민지 시기 남북한이 실제로 얼마나 달랐는지 살펴본다.

1. 기독교의 전파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서북 지역은 새로운 종교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은 서구 열강과 차례로 통상조약을 맺었다(1882년 미국, 1883년 영국·독일, 1884년 이탈리아·러시아, 1886년 프랑스 등). 이 과정에서 서구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포교의 자유를 얻었고, 개신교가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개신교가 어떤 요인으로 한반도에 퍼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전파의 이유가 아니라 결과만 본다면, 개신교가 가장 활발히 퍼진 곳은 서북 지방, 즉 지금의 황해도와 평안도였다.

여기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서북 차별과 개신교 전파를 연결해 볼 수 있다. 새로운 종교나 사상이 서북 지방에서 더 활발했던 이유 자체가, 어쩌면 그 지역이 중앙 권력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조선의 중심 이데올로기였던 유교적 가치가 서북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을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에 조금 더 열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서북 지방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중국을 통해 서구 문물을 일찍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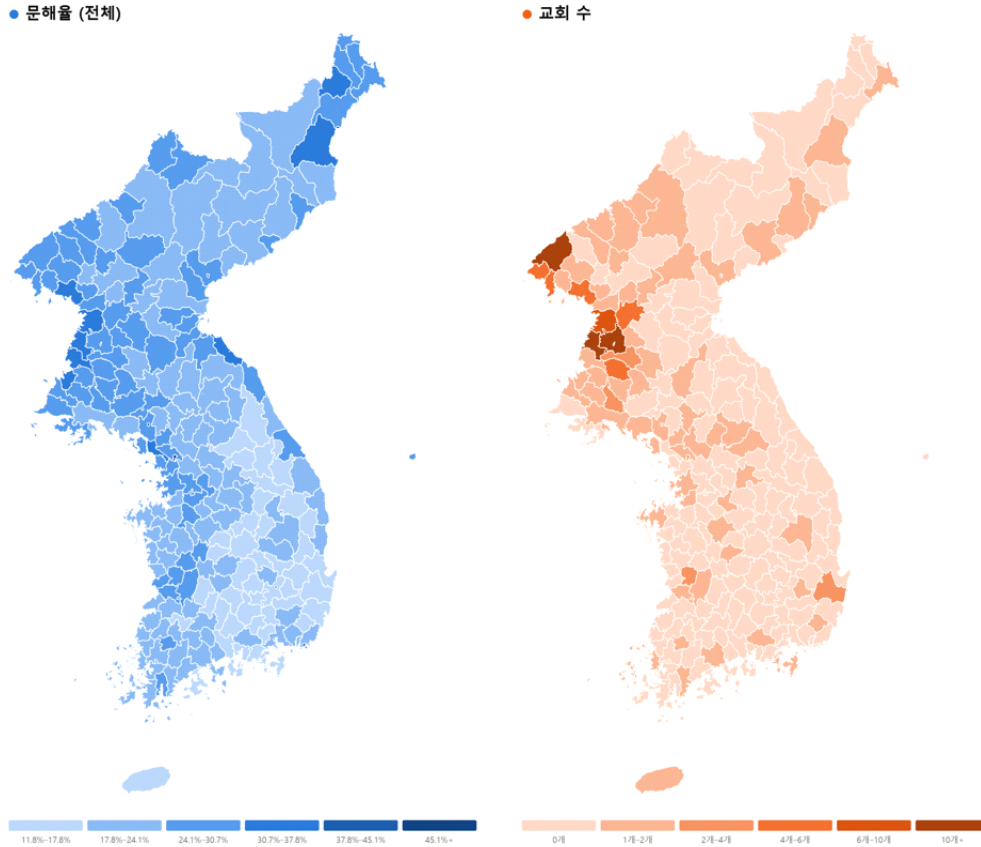
구한말부터 식민지 시기에 일어난 이러한 기독교의 전파 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조선총독부 관보는 종교 시설의 설립과 폐지를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종교시설이 어떻게 생기고 사라졌는지 추적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관보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현대사 DB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관보에서는 개신교 교회, 사찰, 신사의 설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이나 각종 법인의 설립 위치와 설립 연도도 확인할 수 있어, 산업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자료가 아닐지라도 교과 차원에서 생성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장로교의 장로교 연감(1940), 감리교의 감리교 요람(1931)이 교회 위치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개신교가 북한 지방에 활발히 포교된 결과에 대해서도 최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신교 전파와 인적자본 성장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많다. 대표적으로 Izumi *et al.*(2023), Becker and Won(2021; 2024)이 교회 분포와 식민지 시대 인적자본 형성을 다루었으며, 그 결과 역시 흥미롭다. 해당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개신교 교회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문해율, 즉 한국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비율이 높았다.

문해율 정보는 1930년 『국세조사』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¹⁾ 동 조사는 1932년부터 도별 보고서가 순차 발간되기 시작해, 문해율을 포함한 전국 종합 결과표는 1934년에 나왔다. 조사 결과는 1930년 각 지역의 인구, 직업, 문해율 등을 담고 있다. 인구나 직업, 문해율 같은 특정 항목은 군 단위뿐 아니라 면 단위로도 제공된다. 따라서 당시 사회의 인구, 사회적 환경을 파악하는 데 가장 유용한 자료다. 앞서 언급한 개신교와 문해율 연구를 비롯해 식민지 시기 문해율을 다루는 연구는 대부분 이 자료를 쓴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세조사는 이후로도 5년 단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문해율 항목을 담은 것은 1930년 조사가 유일하다. 1935년은 간이국세조사로 축소된 형태였고, 1940년 정식 조사에서는 문해율 항목 자체가 빠졌다. 따라서 식민지 시기 문해율을 다루는 연구는 사실상 1930년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1) 국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진아(2023)를 참고.

[그림 2] 식민지 시기 개신교 교회 수 및 문해율



자료: 국세조사(1930~1934); 장로교 연감(1940); 감리교 요람(1931).

2. 시장 및 직업 분포

앞서 언급했듯이 1930년 국세조사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부분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한다. 여기서 직업 분포를 통해서 남북한의 차이를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자료에서는 직업분류가 상당히 다양하다. 크게 9가지 직업(농업, 수산업, 광업, 공업, 상업, 교통업, 공무자유업, 가사사용인, 기타)으로 구분하고 있다.²⁾

2) 해당 9가지 직업군의 경우(무직을 포함하는 경우 10가지) 면별로 통계를 제시하고 있고, 군별 통계의 경우는 모두 377가지의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어, 상세한 산업 및 직업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1〉 도별 비농업 인구 비율 및 시장 규모

도		비농업 비율 (인구가중 평균)	비농업 비율 (군 단순평균)	1인당 시장규모 (엔/인)
남한	경기	10.87%	7.57%	4,051.30
	강원	4.83%	4.97%	5,981.86
	충북	4.01%	3.79%	6,247.81
	충남	7.06%	7.05%	9,520.24
	전북	6.64%	7.63%	4,918.97
	전남	4.98%	5.76%	4,397.47
	경북	4.67%	4.64%	5,634.92
	경남	7.01%	7.15%	6,549.28
북한	황해	4.69%	4.45%	8,898.16
	평남	7.96%	7.54%	14,491.73
	평북	5.62%	6.34%	13,326.62
	함남	8.37%	9.30%	6,600.58
	함북	9.66%	10.02%	10,635.17
전국 합계		6.59%	6.56%	7,299.41

자료: 조선국세조사(1932) 및 조선경제잡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이를 통해서 각 지역의 산업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데, 당시의 주요 산업이 농업임을 감안할 때,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의 비율 차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

또한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남북한의 시장 규모에 관한 자료이다. 해당 자료명은 『조선경제잡지』(朝鮮經濟雜誌)다. 1928년 한반도 전역에 설치된 상설시장과 해당 시장의 거래량을 다루고 있다. 각 시장의 소재지, 개시 횟수, 시일, 거래량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상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추정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더 상업이 발전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단순히 거래액으로 규모를 보면 남한보다는 북한에서 더 거래가 활발한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비농업인구와 시장 규모를 보면 〈표 1〉과 같다.

비농업 인구 비율을 인구가중평균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이며 그 뒤를 함경도와 평안도가 잇고 있다. 경기 지역이 가장 높은 것은 당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경성(서울)을 비롯한 인천 및 개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순위에 함북, 함남, 평남과 같은 서북 및 동북 지방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북쪽 지방에서 상업과

〈표 2〉 도별 산업별 종사자 비중

도		광업	제조업	상업	교통업	공무자유업
남한	경기	0.24%	9.63%	10.76%	2.61%	4.56%
	강원	0.34%	4.82%	4.70%	0.60%	1.27%
	충북	0.10%	3.20%	4.80%	0.41%	1.40%
	충남	0.10%	9.99%	5.49%	0.72%	1.53%
	전북	0.05%	6.98%	4.81%	0.69%	1.33%
	전남	0.10%	4.23%	3.65%	0.47%	1.03%
	경북	0.07%	4.65%	5.29%	0.49%	1.41%
	경남	0.06%	6.33%	7.20%	1.34%	1.91%
북한	황해	0.62%	2.50%	4.22%	0.69%	1.23%
	평남	0.93%	6.35%	6.12%	1.53%	2.13%
	평북	0.92%	2.87%	4.45%	1.52%	1.61%
	함남	0.55%	10.57%	7.17%	1.57%	1.99%
	함북	1.02%	10.77%	7.85%	2.52%	4.74%
전국 합계		0.35%	6.00%	5.76%	1.10%	1.87%

자료: 조선국세조사(1932)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공업이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군 단위 단순평균으로 다시 살펴보아도 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아, 이 결과가 인구가 많은 몇몇 군에 의해 왜곡된 것이 아니라 도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산업을 광업, 제조업, 상업, 교통업, 공무자유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해당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 지역의 경우 남한에 비해 광업과 제조업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산업의 분포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조선공장명부이다. 이 자료는 1932년, 1934년, 1936년, 1937년, 1939년, 1942년 판본이 확인된다. 해당 기록은 각 공장의 자세한 위치를 비롯하여 소유주명 그리고 생산품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판본들을 이용하면 1930년대 초부터 1940년대 초까지 공장 분포와 특성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식민지 시기의 지역별 공장 분포를 파악하면 아래의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의 경우는 1937년 공장명부를 활용하여 각 산업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한 내용이다. 또한 해당 자료는 공장주의 성명을 표기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공장주가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표 3>에서는 조선인들의 활동을 식별하기 위해서 조선인 소유의 공장만을 집계하여 그 분포를 파악하였다. 경기의 경우 전 산업에 걸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직업 분포에서 보듯이 경기는 당시 대도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기를 예외적인 지역으로 놓고 본다면, 화학산업은 동북 지역, 금속 및 기계산업의 경우 서북 지역에서 주로 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부터 일제의 산업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제조업과 광업이 발전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일본인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의 조선인 역시 남한에 비해서 다양한 산업에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주요 제조업 업종별 도별 비중(조선인)

도		정미·곡물가공	방직·직물	화학·비료	요업	금속·기계	조선·차량
남한	경기	13.33%	22.37%	19.15%	44.66%	32.65%	28.57%
	강원	0.63%	0.66%	13.30%	0.00%	1.02%	0.00%
	충북	2.92%	0.00%	0.00%	2.91%	1.02%	0.00%
	충남	13.33%	0.66%	0.00%	17.48%	4.08%	0.00%
	전북	6.25%	1.32%	0.53%	0.00%	0.00%	0.00%
	전남	10.42%	7.89%	0.53%	0.97%	1.02%	0.00%
	경북	13.33%	24.34%	0.00%	8.74%	5.10%	0.00%
	경남	15.83%	12.50%	16.49%	5.83%	13.27%	0.00%
북한	황해	4.58%	0.66%	0.00%	12.62%	11.22%	0.00%
	평남	9.38%	26.32%	3.72%	3.88%	17.35%	0.00%
	평북	7.92%	2.63%	0.00%	1.94%	9.18%	71.43%
	함남	1.88%	0.66%	46.28%	0.97%	3.06%	0.00%
	함북	0.21%	0.00%	0.00%	0.00%	1.02%	0.00%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조선공장명부(1937)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본 절에서는 개신교 확산과 문해율, 시장과 직업 구조, 산업 분포라는 세 가지 지표로 식민지 시기 남북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개신교는 서북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고, 이 지역은 문해율에서도 앞섰다. 비농업인구 비율과 시장 규모, 광업·제조업 비중에서도 북한 지역이 남한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식민지 시기 북한 지역은 종교와 교육, 산업구조 모든 면에서 남한과 뚜렷이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조선시대의 정치적 소외와는 다른 층위의 차이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적어도 분단 이전부터 남북한이 여러 지표에서 이미 갈라져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IV. 결 론

조선시대 및 식민지 시기의 기초 통계를 활용해 남북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쓰고, 조선시대와 식민지 시기 500년에 걸쳐 같은 국가 아래 있었다. 그래서 두 지역이 비슷한 특성을 가졌으리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분단 이전에도 남북한은 여러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지금의 북한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첫째, 북한에서 사회주의가 남한보다 비교적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역사적 맥락에서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서북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과거시험이라는 관문에서는 배제되지 않았지만, 급제 이후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는 구조적 소외를 겪었다. 식민지 시기에는 급격한 산업화로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임금노동자도 많이 등장했을 것이다. 능력은 인정받지만 권력에는 오르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과, 산업화로 새롭게 등장한 노동자 계층이 맞물리면서, 이 지역이 남한보다 사회주의에 더 친화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Becker, Mergele, and Woessmann(2020)이 독일 사례에서 이미 주장한 바가 있다. 이들은 나중에 동독이 되는 지역의 노동자계급 비율이 공산주의가 도입되기 전인 1925년부터 이미 서독보다 높았음을 보였다. 즉, 사회주의는 무작위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기 쉬운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춰진 곳에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분단의 주요한 원인으로 외부적인 조건이 가장 크게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동시에 이러한 외부적 요건에 대한 보완적 요소로서 이러한 역사적 맥락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사실이 현대 북한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장기 지속성은 경제발전 속도가 더디거나 극적인 변화가 없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식민지 시기에 발전했던 지역은 지금도 북한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자료를 현대 자료와 연결하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다. 물론 현대 북한 자료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하지만 대안적 데이터와 과거 자료를 결합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 기록을 현대의 정밀한 주간 및 야간 인공위성 자료와 겹쳐 보면 과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지금도 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혹은 그 장소가 지금은 무엇으로 쓰이는지 밝히는 것만으로도 북한 사회와 경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과거는 언제나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과거를 아는 것이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를 생각해 보자. 보통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현재 증상만 보지 않고 과거 병력을 함께 살펴본다. 병력을 안다고 모든 증상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력 없이 진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일어난 일은 현재를 구성한다. 개인은 물론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조직도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과거의 경험을 참고한다. 따라서 과거 북한의 사회 모습은 지금의 북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성상업회의소,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조선경제잡지』, 제165호, 1929, pp.3~55.
- 기독교조선감리회총리원, 『기독교조선감리회요람 1931-1932』, 1932.
- 손혜리, 「한문학을 통해 되돌아보는 차별과 배제의 역사」, 『한국한문학연구』, 제76집, 2019, pp.199~234.
-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출신 문신(文臣)에 대한 차별과 통칭(通淸)」, 『한국문화연구』, 제15집, 2008, pp.45~78.
- 이상무, 「조선후기 북한지역 문과(文科) 급제자 분석」, 『한국교육사학』, 제46권 3호, 2024, pp.49~77.
-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선예수장로회연감』, 1940.
- 조선총독부식산국, 『조선공장명부』, 1937.
- Becker, Sascha O., Lukas Mergele, and Ludger Woessmann, “The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of Germany: Rethinking a Natural Experiment Interpretation of the Enduring Effects of Communis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4, No. 2, 2020, pp.143~171.
- Becker, Sascha O., and Cheongyeon Won, “Jesus Speaks Korean: Christianity and Literacy in Colonial Korea,” *Rivista di storia economica*, Vol. 37, No. 1, 2021, pp.7~32.
- Becker, Sascha O., and Cheongyeon Won, “Conquering Korea for Jesus: Protestant Missionaries, Local Churches, and Literacy in Colonial Korea,” *Labour Economics*, Vol. 91, 2024, 102618.
- Hong, Ji Yeon, and Christopher Paik, “Colonization and Education: Exploring the Legacy of Local Elites in Korea,” *Economic History Review*, Vol. 71, No. 3, 2018, pp.938~964.
- Izumi, Yutaro, Sangyoon Park, and Hyunjoon Yang, “The Effects of South Korean Protestantism on Human Capital and Female Empowerment, 1930–2010,”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51, 2023, pp.422~438.